

빗속 상가·성당 돌며 밑바닥 표심 잡기

7·28재보선 한나라 당 차원 지원 유세 자체

민주 정세균 남구, 박지원·손학규 계양을 유세

여야는 7·28 재·보궐선거를 앞둔 주말과 휴일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표밭 갈이'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중앙당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유세를 자체하고 지원요청이 오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유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등 야당이 내건 제2의 정권심판론을 차단하고 철저하게 '지역일꾼론'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수도권과 충청 등 전략지역을 대거 방문해 총력전을 펼쳤다.

정 대표는 서울 은평을, 인천 계양을, 충남 천안을 차례로 방문해 '정권심판론 바람불이'에 나섰고, 박지원 원내대표와 손학규 상임고문은 인천 계양을에서, 정동영 상임고문은 강원 원주에서 지원유세를 펼쳤다.

앞서 주말인 17일에는 경세균 대표가 광주 남구를 방문해 장병완 후보 지원유세를 벌였다.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장병완 후보와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도 본격 선거운동 후 첫 휴일을 맞아 남구 곳곳을 누비며 얼굴알리기와 함께 밑바닥 표심잡기에 분주했다.

장 후보는 18일 오전 제석산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내 동호인들 축구대 회장과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할인

동을 치르기로 한 만큼 중앙당의 총력 지원유세에서 탈피, 선별적 지원유세를 이어갔다.

서울 은평을 재선거에 출마한 이재오 후보도 이날도 중앙당의 도움 없이 지역 내 조기축구회, 교회 및 성당 등을 찾아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나홀로' 선거 운동을 계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 은평을 등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선거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도 4대 강 사업과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정권 실세의 인사개입 의혹 등 국정 난맥상을 집중 부각하며 '제2의 정권 심판론' 확산에 주력했다.

정세균 대표는 오전 장상 후보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평성전을 찾았다. 후보 및 지역 중심으로 선거운

신도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박지원 원내대표, 손학규 상임고문 등과 함께 인천 계양을에서 유세를 벌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에도 시동을 걸었다.

장상 후보 선대위는 지난 2008년 이재오 후보의 최측근 3인방의 대우 조선해양 경영진 무더기 임명 등을, 우상호 대변인은 충남 충주의 한나라당 윤진식 후보의 병역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은평을은 야권이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결단'을 압박했다.

/최경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7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남광주농협 앞 지원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장병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민주 '빅3' 재보선 올인

결과따라 이해관계 엇갈려 속내 복잡... 한나라와 대조적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들이 7·28 재보선의 전면에 나서 당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다. 당지도부가 선거 지원에 소극적인 한나라당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민주당의 '빅3'는 지난 15일 출정식에 나란히 참석한 뒤 각자 전국 각지로 흩어져 선거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 대표는 18일 천안 유세를 끝으

로 재·보선 지역구 8곳 순회를 마무리하는 등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눈을 붙이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비슷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이해가 엇갈릴 수 있어 속내는 복잡하다.

손 전 대표 역시 지난 15일 새벽 5시 춘천에서 상경한 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 이상으로 선거지원을 하고 있다.

정 의원도 당내 비주류연합체인 채신연대 발족 등으로 정 대표와 각을 세워왔지만 잠시 나마 '내전'을 종단하고 선거 현장을 누비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비슷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이해가 엇갈릴 수 있어 속내는 복잡하다.

우선 정 대표가 선거 성적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연승 기록을 이어갈 경우 당내 입지가 더욱 탄탄해지며 전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공천 잡음

의 후유증까지 다시 불거지며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손 전 대표와 정 의원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 모두 선거전에서 뒷짐을 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손 전 대표는 그동안의 침겨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 재보선 구원투수의 면모를 또 한번 과시, 당내 영향력을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의원도 당을 위해 기여하는 모습을 통해 '당권 투쟁, 계파 정치에만 몰두한다'는 주류 일각의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선거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대강·영포회·정권심판론·여권 대개편

재보선 '뜨거운 감자'로

7·28 재·보선을 열흘 남겨두고 정권심판론과 4대강 사업 등 각종 선거 쟁점으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점에 '지역일꾼론'을 내세워 대항하는 한편 당·정·청의 대대적 개편으로 민심을 파고 듣다는 전략이다.

◇정권심판론=야당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서울 은평을에서는 이같은 여야의 상반된 주장이 점화되면서 맞서고 있어 어느 주장이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여권 대개편=재·보선을 앞두고 여권은 대개편을 시도 중이다. 7·14 전당대회를 통한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 구성, 세대교체와 지역

안대로 대표되는 청와대 3기 참모

진 출범이 이뤄진데 이어 조만간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인적 개편이 재·보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 인적개편을 평가절하하며 그 과정 효과를 경계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의혹 및 권력투쟁 설=민간인 불법사찰의혹에서 비롯된 특정 세력의 인사개입 논란과 여권 내 권력 투쟁설은 야당에게 이번 재·보선의 최대 공격거리다. 제2의 정권심판론을 지탱할 한축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치공방에 뛰어드는 대신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처벌해야 한다"며 차단막을 치고 있다.

◇4대강 사업 논란=여당에게

피해가기 힘든 쟁점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는 정권심판과 직결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다소 보완·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또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 중이다.

정세균 대표는 17일 오전 광주 남구 프라로 호텔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대운하로 의심되는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7월 말까지 4대강 사업의 대안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4당 4대강 저지 공동 대응

오늘 국회서... 재보선 단일화 거론 예상

민주당 등 야4당 대표가 19일 회담을 갖고 4대강 사업 저지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진보신당 노회찬,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어 4대강 사업 중단

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18일 전했다.

야4당 대표는 회담에서 야당 대표들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 및 무소속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연석 회의 구성을 비롯, 구체적 액션 플랜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은평을에 나타난 '박사모'... 이재오 낙선 운동? 공명선거 캠페인?

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낙선했기 때문인가?

회원들이 서울 은평구에 나타나 키자. 야당은 단일화하라는 구호를 외쳤다"며 "일부 회원들은 '나 선운동은 불법이 아니다'란 데를 막고 은평을 지역을 돌아다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사모 정광용 대표는 "오늘 회원들이 '이재오 낙선'

구호를 외친 적이 없고 외쳤을 리도 없다"고 부인한 뒤 "선거율이 재보선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공명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캠페인을 벌였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현재 직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이들이 위법 행위를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